

2019년 9월 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업통상과 과 장 김경미(044-201-2051), 사무관 이인애(2054) / 제공일: 9월 6일(총 1매)

적령치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현재의 농산물 관세율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[한국일보 9.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]

- 개도국 지위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됨
- 한국일보 <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수순, 농업 대책부터 마련해야> 등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

주요 언론 보도내용

-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쌀 관세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함
 -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외국산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하고, 농업보조금도 기존 1조 4,900억 원에서 8,000억 원대로 낮춰야 한다.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
 - 농업보조금 1조4900억원을 8195억원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임
 - 개도국 지위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됨